

광주는 투기거래 없나...광산구 신규 공공택지 전수조사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문 대통령 전수조사·엄중대응 지시
3기 신도시 전체 지역 확대 조사
투기거래 확인뎀 조성 일정 차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 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규 공공주택 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서 투기 거래가 확인되면 2029년 완공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나아가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에 "3기 신도시 전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의혹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정책, 나아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

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 지역도 광명·시흥 신도시를 물론 광주 등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됐으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 산정동 공공 주택지구를 포함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주택 공급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광주 산정동 공공 주택지구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 3000가구,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이 조성된다. 송정역과 가까워 광역교통 여건이 좋고 하남진곡산단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하남대로를 통해 광주 도심뿐 아니라 무안, 나주 등 전남 인접 사군과의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점에서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절차가 순조로우면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이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은 LH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전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 공항·항만·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초라한 서남권'

9.2조원 투자 서남권 공항 없어
광양항 투자액 부산항 3분의 1
철도 신규사업 36개중 호남 단 3개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16~2020),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등 정부의 국가기반시설 계획을 분석한 결과 계획 전반에서 서남권이 가진 위상은 초라했다. 인구와 경제 규모를 우선으로 한 소위 '경제성'을 따지는 방식의 국가재정 투입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으로의 기반시설 집적 및 고도화를 위주로 했기 때문이다.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정부는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추진하되 지자체 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통합 시기를 검토한다고 명시한 후 지원을 중단했다.

혁신공항은 설계, 공사 등 사업을 본격 진행해 2020년경 개항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 국립공

원위원회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과 지척에 있는 전북의 새만금지역에 공항 개발을 위한 수요·임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서남권의 공항은 '작은 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계획기간 내 약 9.2조원의 재원을 공항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서남권 공항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었다. 울릉·흑산공항, 제주 제2공항, 기타 등에 1.56조원(17%), 인천공항공사 3단계 사업, 유지보수 및 시설정비·확충 등에 5.94조원(64%),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리모델링 등), 김해공항(국제선터미널 확장 등), 제주공항(단기 인프라 확충 등), 울릉·흑산공항 일부 시설 보조 등에 1.7조원(19%) 등을 배정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은 당초 지난해 말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올 상반기로 연기했으며, 여기에는 가덕도신공항 관련 계획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의 주요 항만 중장기 투자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부산항에 10.82조원, 광양항은 3.7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투 포트'

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격차라는 지적이다. 울산항에 5조원, 인천항에 3.48조원을 각각 배정했다는 점은 현 정부에서의 광양항 위상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정부 투자로 부산항은 생산액이 14조189억원이 증가하지만 광양항은 고작 5조733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친다. 광양항은 울산항(6조3342억원)보다 적고 인천항(4조5906억원)보다 조금 큰 규모다. 부산항의 2030년 물동량은 2019년의 1.5배로 성장하는 반면 광양항은 10% 내외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호남은 푸대접이다. 44.6조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 36개 가운데 호남에 해당되는 것은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1524억원),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화(2조304억원), 보성-목포 단선전철화(1702억원) 등 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이 경부선, 수도권 내 광역철도망 등과 관계돼 있다. 이 같은 기반시설의 심각한 격차는 지역 경제 성장과 미래 잠재력에서의 차이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국회서 반영되나

여야 "추경 증액해 지원해야"
4차 재난지원금(10조9000억 원)이 반영된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은 농·어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 얼마만큼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4일 정부의 추경안이 넘어오는 대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선다. 정부의 4차 추경안에는 농수축산림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수축산림업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 분야 직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고 더

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이날 오후 원내 지도부와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광주일보와 만나 "농수축산림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농도인 전남은 이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농수축산림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일단 전국 농수축산림 가구 113만 8000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면 1조1380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6000억~8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 부진과 가격 폭락 등으로 농어민들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의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농수축산림업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권 대권주자, 이재명 34% 독주...이낙연 17%

리서치뷰 적합도 조사...추미애 5%·정세균 4%·임종석 2%
달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가 이 지사를 뽑아 선두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17%로 집계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5%), 정세균 국무총리(4%),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용진 의원(2%)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응답자의 46%가 이 지사를 선택, 이 대표(31%)를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라인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On-Line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1

4. 1. 목 ~ 4. 16. 금

www.왕인문화축제.com

YouTube 영암왕인TV

가찬영암ONTACT

- 유튜브와 떠나는 3인 3색 랜선 영암여행
- 가찬영암 브이로그
-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 혜택 가득! 가찬영암 라이브 커머스
- 온라인 영암 마켓
- 온택트 영암예술무대
- 온택트 개막콘서트
-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11개 읍·면)
- 온택트 폐막행사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요!'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지상백일장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집콕놀이! 왕인키트
·집콕! 챌린지
·집콕ON! 글로벌 왕인 홍보단
·왕인박사 추모 헌다례와 문화 강연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군항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문의전화 | 061-470-2347